

코로나 19 신규확진 9만3001명, 옛새만에 10만명 아래로

위중증 893명...중환자 병상 가동률 46.9% 신규 입원환자 775명, 옛새만 1000명 아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3001명으로 집계돼 옛새 만에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800명대로 줄어 들었다. 사망자 수는 사흘째 200명대를 유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9만3001명 늘어 누적 1630만5752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의 10만7916명보다 1

만4915명, 일주일 전인 10일의 16만4456명보다는 7만1455명 각각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1일(9만917명) 이후 옛새 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9만917명→21만732명→19만5397명→14만8431명→12만5846명→10만7916명→9만3001명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3만8891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1만4805명, 경기 2만3118명, 인천 4874명 등 수도권이 4만2797명으로 46.0%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5만204명(54.0%)이 나왔다. 경남 5516명, 충남 5452명, 경북 5053명, 전남 4396명, 대구 4210명, 전북 4158명, 광주·충북 각 3561명, 대전 3558명, 부산 3375명, 강원 3113명, 울산 2018명, 제주 1468명, 세종 755명, 검역 10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9만298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은 2만3137명(24.9%)이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1만8126명(19.5%)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서는 검역 단계에서 10명, 지역사회에서 8명이 각각 확진됐다. 내국인은 11명, 외국인인 7명이다. 유입 추정 국가는 중국과 아시아 17명, 유럽 1명이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줄어든 893명이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6.9%로 전날(48.5%)보다 1.6%포인트 낮아져 안정적이다. 병상 2825개 가운데 1499개가 비어 있다. 수도권 가동률은 45.0%, 비수도권은 51.5% 수준이다. 신규 입원 환자 수는 775명이다. 지난 11일(916명) 이후 옛새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확진 판정 후 하루 이상 입원 대기 중인 환자는 없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03명으로 직전일(273명)보다 70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1092명,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13%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83만4058명이다. 이 중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7만1898명(8.62%)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전국에 1163곳이 운영 중이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9653곳,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상담센터는 254곳이 운영하고 있다. **오유나 기자**



북한 미사일 발사 속보에 쏘린 눈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속보를 보고 있다.

권익위 지자체 청렴도 평가 문제 있다...20년만에 대폭 개선

금품수수로 단체장 직위 상실해도 2단계 상승

지난해 권익위 평가 청렴도 3등급을 받은 전남도청 본관 앞에 전남 22개 시·군·구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전 연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1년간 민원인과 내부 공무원 대상 100% 설문조사로만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올해부터 더 객관적인 척도로 청렴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렴도 측정은 민원을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각각 75%, 25%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설문 위주로 평가되고 있어 일선 기관들의 불만이 계속 나왔다. 외부인 평가의 경우 태양광·산림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들에게 공무원 청렴도를 묻다 보니 허가를 받지 못한 민원인은 인색하게 점수를 매기는 폐단이 생겼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청렴도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허가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왔다.

실제로 송도군 시장이 금품수수로 시장직을 상실한 경남 사천시도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군수가 뇌물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경북 군위군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다. 정현복 시장이 부동산 투기와 인사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광양시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 해양수산보조금을 빌미로 어민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인천시와 시의원과 담당공무원들이 뇌물수수로 검찰에 송치된 경기 양주시는 기존과 동일한 3등급을 받았다. 반면 2019년부터 3년 연속 청렴도 5등급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순천시도 역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전입 시장 때 벌어진 금품수수를 적발해 수

사 의뢰했으나 오히려 감점을 받았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허석 시장 취임 후 일부 지자체장들이 암묵적으로 하는 승진 인사의 매관매직을 철저히 배격해 직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승진 비리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자체 정화 작업이 막목을 잡은 셈이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00%를 차지하던 청렴도 설문조사 비중을 60%로 줄이고, 지자체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로 측정해 40% 반영하기로 했다. 권익위 청렴조사평가와 관계자는 "2002년부터 시행하던 평가 방법을 20년만에 대폭 개편했다"면서 "부패 발생 시 최대 10%를 감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함께 파악하는 종합 평가체계로 바꿨다"면서 "부패방지시책으로 상징되는 청렴 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 반부패 노력 등을 동시에 분석해 시스템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화순 세랑지 인근 야산 불...임야 0.2ha 소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화순의 한 야산에서 등산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2ha가 탔다. 17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6분께 화순군 화순읍 세랑계 인근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나 1시간 14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2ha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

었다. 진화 작업에는 산불 진화 헬기 8대(지자체 임차 7대·산림청 1대), 산불 진화차 4대, 소방차 6대, 산불 진화대·소방관 등 90여 명이 동원됐다. 산림당국은 등산객의 실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화순·곡성·보성에 건조주의보를 내렸다. 화순=박순철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